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한국경제가 「IMF 법정관리」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학기업들도 더 이상의 방만한 사업운영이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재벌들의 구조개혁은 지금까지 비전문적 오너경영,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자본금의 300~1200%에 이르는 유래없는 차입경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고, 또 「IMF 신탁통치」 아래서는 구조조정을 피하려해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재벌들은 기금까지의 방만한 경영에서 탈피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한국경제 전체로 보아서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었고 또 숙제였던 문어발식 확장과 부채경영을 척결할 수 있는 발판이 미련됐고 관철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사상 유래가 없는 IMF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데 따른 국민일반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고, 새 정부도 민주주의의 안착과 아울러 국민위화의 근본으로 작용했던 무절제한 사업확장 및 부채경영을 차단하고, 탈세와 불로소득을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철저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차입경영에 의존해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일삼던 재벌관행은 더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정부와 IMF가 합의한 △상호지급보증 조속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원활한 기업퇴출제도 정비 △과다차입 축소 등을 준수함으로써 외환부족사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재벌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 4대재벌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IMF체제 조기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하고 주요 재무정보의 성실한 공시를 통해 회계관행을 국제화하며, 상호 자금 및 경영지원 관행을 원칙적으로 단절해 개별기업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계열기업 부실이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재벌총수들도 불필요한 업종 및 자산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조를 정착시키고, 구조조정시 자기재산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보증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며, 경영부실시 경영진 퇴진 등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IMF의 법정관리가 서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의 30년 숙원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만, 한국재벌들이 30여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눈앞의 위기상황에서는 죽은 듯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별의별 이유를 달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새정부와 국민들은 재벌들이 구조조정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행정부서 축소 및 인원감축을 통해 시범을 보이고, 국민 스스로도 그동안의 과소비와 향락적 소비행태를 과감히 도려내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는 방만했던 투자 뿐만 아니라 방만한 인력관리 해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화학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화학기업의 주먹구구식 경영은 WTO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화학제품의 특성상 자유무역이 일반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보호와 특혜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남아 있는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석유화학기업들은 대부분이 30대재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의 대상에서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삼성·현대를 비롯 석유화학기업들은 88년이후 경쟁적 신증설을 통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55만톤에서 500만톤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장해 왔으며, 합성수지는 국내 수요의 200~300%에 이를 정도로 무지막지한 과잉투자를 일삼아 왔다. 그 후유증이 어느정도인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화부채 1530억달러의 10%, 적게 잡아도 6~7%는 석유화학의 과잉투자에 기인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 후진적 경영행태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잉투자에 따른 적자를 「담합」을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벌 및 석유화학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경영혁신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

<화학저널 1998/2/2>